

## 광주시 건축위원회 29명 중 11명

# 관련업체 대표로 구성 논란

### 심의 왜곡 우려

광주시 건축위원회 위원 중 3분의 1 이상이 건축사무소나 관련 업체 대표로 구성돼 논란이 일고 있다. 관련 업체의 과도한 위원회 참여로 인해 건축심의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크고,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다는 위원회 구성의 본래 취지도 어긋난다는 목소리가 높다.

29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달 1일 임기 3년의 '광주시 건축위원회'를 구성하면서 29명의 위원 가운데 임명직 공무원 4명을 제외한 25명의 위촉직 중 11명을 건축사무소 대표와 관련 업체 대표 및 임원으로 채웠다. 나머지는 교수 10명, 변호사 2명, 연구원 1명, 장애인복지 관계자 1명 등이었다.

또 건축위원회에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심의 기능이 추가됨에 따라 교통전문가 6명을 위원으로 위촉하면서 이 중 4명을 업체 대표와 임원으로 했다. 대규모 건축물이 들어설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하는 교통 정체의

문제점을 제기해야 할 위원의 3분의 2가 건축주로부터 의뢰를 받아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하는 업체 관계자로 구성된 것이다.

이 같은 위원 구성은 건축조례를 위반했다는 지적도 있다. 광주시 건축조례는 '건축·토목·도시계획·도시설계·에너지·교통 등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자 가운데 건축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조례에서는 '위원 본인 및 소속된 사무소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안건에 한하여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고 못박고 있다.

이와 관련 시 건축주택과 관계자는 "광주지역 대학 교수들에게 참여를 당부했으나 지원자가 적어 별 수 없이 업계에서 위원을 뽑을 수밖에 없었다"며 "심의안건에 관련된 위원에 대해서는 해당 회의에서 제외하면 된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건축주택과에 교통전문가를

추천한 교통정책과 관계자는 "기존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사위원회 위원 39명의 명단을 모두 보냈는데 건축주택과에서 이런 식으로 위원을 선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광주지역 한 건축공공 교수는 "위원회가 구성된다는 소식조차 들은 바 없다"고 반박했다.

광주시 건축위원회는 대규모 택지 개발에 따른 아파트 단지, 16층 이상 건축물, 다중이용건축물 중 바닥면적의 합계가 3만㎡ 이상인 건축물 등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 건설업체나 건축주로부터 건축계획을 제출받아 이를 심의, 가결·부결·보안·재심의 등의 결정을 내리는 막중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광주 소재 한 대학 교수는 "위원회가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업체 관계자가 위원으로 참여하게 되면 심의 자체가 왜곡될 수 있다"며 "해당 실·국에서 위원회 구성의 전적인 권한을 가진 것이 그 원인으로 보완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 월드컵 영웅들이 돌아왔다 ▶ 관련기사 18면



29일 2010 남아공월드컵에서 원정 첫 16강을 이루고 귀국한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해 환영은 팬들에게 손을 흔들고 있다. /연합뉴스

### ■ 민선 5기, 광주일보의 4대 제안

## ‘거수기’ 그만 ‘지방 입법부’ 자부심 가져라

#### 실는 순서

- 1 주민과 소통하라
- 2 낮은 관행 깨뜨려라
- 3 의회는 견제하라
- 4 일자리를 만들어라

#지난해 9월 지방재정 악화 우려를 낳았던 6372억 원 규모의 전남도 2차 추경예산안이 의원들의 찬반토론과 표결 끝에 통과됐다. 재석의원 41명 가운데 찬성 33명, 반대 6명, 기권 2명이었다. 하지만, 민노당 소속 고승자 의원 등 일부 도의원은 "상임위가 삭감했던 예산을 예결위가 사전 상의

#### 집행부 감시위해 독립성·전문성 강화를

없이 되살려 상임위를 무시했다"며 예산안 심의 과정에 강하게 이의를 제기하고 나서 논란이 일었다.

#민주당이 독점했던 제5대 광주시의회는 지난 2월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일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의 반발에도 경찰력을 동원해 의장 직권상정으로 기초의회 4인 선거구제를 2인 선거구제로 분할하는 내용의 기초의원 정수 조례안을 처리했다. 진입 장벽을 높여 '소수 정치세력'을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시도라는 비판을 샀다.

그동안 지방의회가 집행부를 제

대로 감시·견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은 끊이지 않았다. 사실상 지난 4년간 지방의회는 풀뿌리 민주주의 구현과 거리가 멀었다. 특정 정당의 독식으로 사당화된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거수기'로 전락했다. 지자체가 제출한 예산·결산안은 삭감 등 수정 없이 통과되는 것이 보통이다.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 결과 2006년부터 지금까지 전국 광역의회 예결산안의 원안 가결률은 무려 48.8%였다. 예·결산안의 절반은 그냥 통과시켜준 셈이다.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 의원 안 가결률은 이보다 더했다. 광주

는 63%, 전남은 59%에 달했다. 10건 중 6건은 원안 가결된 것이다. 기초의회는 더 심해 원안 가결률이 78.78%나 되는 곳도 있었다. 예산이 부족하고, 지방재정 악화로 공무원 봉급도 못 준다고 아우성이지만, 의회는 집행부의 예산·결산 등을 꼼꼼하게 따져보지도 않고 '좋은 게 좋은 것 아니냐'라는 식으로 넘어가고 있는 것이다.

입법활동도 그다지 좋지 못했다. 지난 4년간 광역의회의 조례 발의 및 처리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국 광역의원 1인당 평균은 2.07건이었다. 전남도의회는 평균에 못 미치는 1.90건이었으며, 광주시의회는 4.22건으로 체면치레는 했다.

▶2면으로 계속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세종시 수정안 국회 본회의도 부결

### 찬성 105·반대 164...10개월만에 중지부

충남 연기군 세종시로의 행정기관 이전을 백지화하는 내용의 '세종시 수정안'이 29일 국회에서 부결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표결을 실시, 찬성 105명, 반대 164명으로 부결시켰다. 이날 표결에는 재석의원 291명 가운데 275명이 참석했고 6명이 기권했다. <관련기사 3면>

이로써 정운찬 국무총리가 내정된 지난해 9월부터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세종시 건설 수정계획은 10개월 만에 중지부를 찍게 됐다.

또한, 9부2처2청의 행정기관 이전을 골자로 한 원안인 '행정중심복합

도시'의 건설이 추진될 전망이다.

세종시 수정안은 지난 16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서 부결됐지만 '역사의 기록'이라는 명분으로 임동규 의원을 필두로 한나라당 의원 66명이 이날 본회의에 부의, 상정됐다.

지난 6·2 지방선거의 패배에 이어 이명박 대통령이 역점사업으로 추진해왔던 세종시 건설수정 계획의 좌초로 여론은 향후 국정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세종시 원안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권을 비롯한 '플러스 알파'를 놓고 논란이 재연되는 등 세종시 논란이 제2라운드를 맞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전망이다. /임동욱기자 tuim@

학교설립 56주년 (1954~2010)

믿음, 소망, 사랑으로  
키워달라 세상을 만드는  
젊은 지성인과 교육의 요망!

**광신대학교**

법학문의 광 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제일건설(주) 제일건설(주)에서 알려드립니다**

금번 정부의 건설사 구조조정에서 워크아웃대상 등급을 받은 전북 익산 소재 동일한 상호의 건설사와 저희 제일건설(주)와는 전혀 다른 별개의 회사임을 고객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당사는 이번 평가에서 **"정상등급 (A등급)"**을 받았습니다.

전국 1만여 세대의 제일풍경채 가족과 협력업체께서는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저희 회사는 2009년도에 인천 청라 경제자유구역에서 아파트 1,071세대를 3.2:1로 분양 완료하였고 기 분양 완료된 광명시 재건축 제일풍경채는 오는 9월에 입주합니다.

항상 저희 제일건설(주)에 보내주시는 고객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0년 6월 제일건설(주) 임직원 일동 [www.e-jeil.co.kr](http://www.e-jeil.co.kr)